
정책참고자료

2018-3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매년 5% 이상 증가, 국가법령의 22배	4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품질향상 적극 지원 -	
2	국민권익위원회	
	보훈대상 심사 때 의료기록 제출 못하면 목격자 증언 등 고려해야	8
	-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 의견표명 -	
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유망창업의 꿈,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10
	- 2018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제 7기 교육생 150명 모집 -	
4	교육부	
	장애학생 차별금지,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등 배치	15
	-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수출을 위한 민관 공동'강릉 ICT홍보관개관	21
	- 인천공항 ICT라운지, 평창 ICT체험관 강릉 IoT Street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	
6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한국전통문화센터'신규 개관	25
	- 전통문화 융합 체험.전시와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홍보 -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 농정의 이정표 제시	33
	-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발표 -	

8 환경부

환경분야 국가표준 발전 논의..2018년도 워크숍 개최 _____ 42
- 국립환경과학원, '2018년 환경표준심의회 워크숍'개최 -

9 고용노동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대상 확대 _____ 45
- 서비스 . 단순노무 등도 연장수당 월 20만원 제외, 수혜자 확대 효과 -
- 30인 이상 경비 . 청소원도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

10 여성가족부

'여성일자리'와 '맞벌이가정 초등돌봄' 강화에 240억 원 규모 민관협력 _____ 49

-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90만 원 지급
- 맞벌이가정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150개소 설치 지원

11 국토교통부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한다 _____ 55
- 주거약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12 해양수산부

해수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더 간간하게 _____ 57
-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대폭 개선... 장거리 해상안전통신망 구축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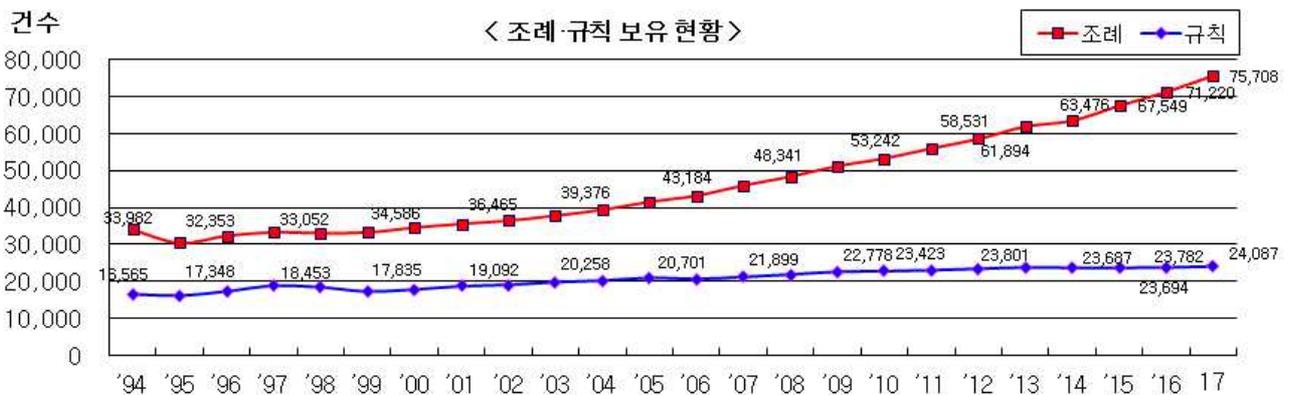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매년 5% 이상 증가, 국가법령의 22배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품질향상 적극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법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년 말 자치법규는 총 99,795건(조례 75,708건^(75.9%), 규칙 24,087건^(24.1%))으로 '95년 민선자치 이후 20여 년간 연평균 5% 이상, 조례의 경우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향후 지방분권의 확산, 권한 이양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 중심의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연도별 자치법규 보유 현황 >>



-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평균 653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평균 391건의 약 1.7배에 달하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시의 자치법규가 평균 46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 시·군·구별 현황 >>

구분		'17년말 보유			평균(보유수/지자체수)		
		계	조례	규칙	계	조례	규칙
계		99,795	75,708	24,087	411	312	99
광역시 (17)	시(8)	5,170	4,073	1,097	646	509	137
	도(9)	5,942	4,678	1,264	660	520	140
기초 (226)	시(75)	34,805	26,398	8,407	464	352	112
	군(82)	31,486	24,091	7,395	384	294	90
	구(69)	22,392	16,468	5,924	325	239	86

※ (최다/최소 보유 지자체) 광역 시·도 중 조례는 경기(735건)/충북(363건) 규칙은 서울(220건)/세종(97건)이며, 기초 시·군·구 중 조례는 창원(483건)/부산연제구(184건), 규칙은 성남(162건)/부산중구(65건)임.

□ 2017년 한 해 동안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는 총 28,878건(제정 6,027건, 개정 21,631건, 폐지 1,220건)으로, 이는 전체의 28.9%에 해당되며, 중앙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일제 정비 및 주제(테마)별 기획정비를 추진한 결과**이다.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한 조례, 시효가 끝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 ('17년) 일제정비 8,790건 발굴 5,578건(63.5%) 정비, 기획정비 14,000여건 발굴 추진중

<< 자치법규 운영 현황 >>

구분	'16년말 보유①	'17년 자치법규 운영				기타* ⑥	증감⑦ (③-⑤-⑥)	'17년말 보유 (①+⑦)	
		소계②	제정③	개정④	폐지⑤				
합계	95,002	28,878	6,027	21,631	1,220	14	4,793	99,795	
시·도	소계	10,382	4,182	922	3,096	164	28	730	11,112
	조례	8,059	3,394	824	2,457	113	19	692	8,751
	규칙	2,323	788	98	639	51	9	38	2,361
시·군·구	소계	84,620	24,696	5,105	18,535	1,056	△14	4,063	88,683
	조례	63,161	18,910	4,460	13,804	646	18	3,796	66,957
	규칙	21,459	5,786	645	4,731	410	△32	267	21,726

* 기타는 전년도 통계 오류사항(중복, 누락 등)

- 제정·개정·폐지된 조례(22,304건)의 발의 주체(단체장/의원)를 살펴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0.2%/59.8%로 비교적 의원 발의 비율이 높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79.3%/20.7%로 단체장의 발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전년대비(광역 49.3%/50.7%, 기초 82.1%/17.9%) 전 지자체의 의원 발의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조례 발의 주체 현황 >>

구분	총계	단체장 발의 (%)	의원 발의① (%)	제정		개정		폐지		의원 수 ②	의원 1인당 발의수 (①/②)
				단체장 발의 (%)	의원 발의 (%)	단체장 발의 (%)	의원 발의 (%)	단체장 발의 (%)	의원 발의 (%)		
총계	22,304	16,353 (73.3)	5,951 (26.7)	2,607 (49.3)	2,677 (50.7)	13,103 (80.6)	3,158 (19.4)	643 (84.7)	116 (15.3)	3,692	1.6
시·도	3,394	1,366 (40.2)	2,028 (59.8)	139 (16.9)	685 (83.1)	1,178 (47.9)	1,279 (52.1)	49 (43.4)	64 (56.6)	794	2.6
시·군·구	18,910	14,987 (79.3)	3,923 (20.7)	2,468 (55.3)	1,992 (44.7)	11,925 (86.4)	1,879 (13.6)	594 (92.0)	52 (8.0)	2,898	1.4

- '17년 주민 발의 조례 청구는 16건(사·도 2, 사·군·구 14)으로 최근 5년간 평균 5.6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였으나 '17년에는 지자체 현안 중심의 주민조례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6년의 4배)

< 2017년 주민조례 청구현황 >

① ○○시 청년월세 지원에 관한 조례, ② ○○구 교육안전지원조례, ③ ○○구 마더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④ ○○시 시민현장 실천 조례안, ⑤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 ⑥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⑧ ○○도 인권 조례 폐지, ⑨ ○○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⑩ ○○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⑪ ○○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⑫ ○○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⑬ ○○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⑭ ○○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 ⑮ ○○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⑯ ○○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 지원에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훈대상 심사 때 의료기록 제출 못하면 목격자 증언 등 고려해야

-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 의견표명 -

- 보훈대상 심사 신청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이 문을 닫아 당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목격자의 핵심 증언이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얼굴을 다쳤는데도 당시 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모 씨(65세)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훈대상자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31일 밝혔다.

- 이 씨는 지난 1977년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산만 해안 소초에서 야간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추락해 눈 주위에 골절 부상을 입었다. 이 씨는 현장에서 위생병에게 응급치료를 받고 온양에 있는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 씨는 2005년 전역 후 '28년전 해안에서 추락하여 좌측 두피의 피부감각이 저하되었다'고 군 병원 진료기록을 근거로 육군에 전공상 인정을 신청해 공무 관련 상해로 인정받았다.

이 씨는 이후 '얼굴뼈 골절과 수술흔적이 있고 뺨조각이 남아 있다'는 군 병원(2015년)과 ○○대학병원(2016년)의 진단을 근거로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부상 당시 의료기록이 없고 이 씨가 제출한 진단서가 사고 후 20년 이상 지나서 작성돼 신뢰할 수 없다며 '비 해당'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씨가 치료받았던 민간병원은 1990년대 이미 문을 닫아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이 씨는 직접 수소문한 끝에 당시 위생병을 어렵게 찾아 인우보증서*를 받아 다시 보훈청에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비 해당' 처분을 받았다.

* 친구, 친척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특정사실을 증명하는 행위

이 씨는 국가보훈처가 인우보증서에 대해 '민간병원에 후송해 응급 처치를 했다는 입증자료이므로 이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라'며 공문 회신했는데 같은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한 것이 지나치다며 국민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당시 위생병으로 근무했던 목격자를 직접 만나 이 씨가 밤에 순찰 중 추락해 다쳤으며 자신이 치료해 주었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사고 전 사진에 얼굴에 흉터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씨의 공무 중 부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무 환경과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 상황, 당시 목격자의 증언 및 사고 전후 사진, 이후 의료기록 등 제반사정과 대안적인 자료 등을 고려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신청인의 경우는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당시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유망창업의 꿈,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 2018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제 7기 교육생 150명 모집 -

#1 ‘미래아우드디자인’ 김상희 대표(‘16년 4기)는 의류사업을 하다 한계를 느끼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여, 품질이 좋은 자작나무 원목을 재료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자작나무 회전책장을 주력상품으로 직접 제작 판매와 공방도 함께 운영하며 월매출 1천5백만원의 성공적인 창업을 하였음

#2 ‘트리플디’ 신도연 대표(‘16년 4기)는 직접 만드는 유기농 디저트 창업을 목표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든 디저트를 판매하는 유기농 디저트 카페(티라미수는 한 달에 천 개 이상 판매될 정도로 인기)로 월 2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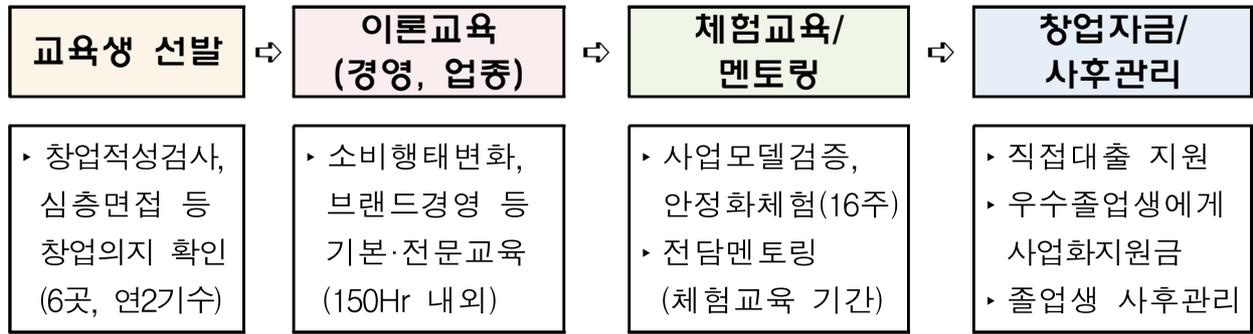
□ 중소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들의 창·폐업이 빈번한 생계형 업종에서 非과밀업종으로 창업촉진을 위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상반기 교육생을 2.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18년 교육생 모집규모 : ('18.상, 제7기) 150명, ('18.하, 제8기) 150명

□ 본 사업은 베이비부머 은퇴, 구조적 실업,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생계형 업종의 낮은 생존율 개선을 목적으로,

○ 신사업 분야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연 2회 300명 선발하여, 체계화된 이론교육/체험교육/멘토링을 제공하고, 우수 졸업생의 경우 사업비 (최대 2천만원, 자부담 50%)도 지원하여 기회형 창업을 돕고 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체계 >



□ 올해는 특히, 양질의 교육커리큘럼과 사업기회 제공을 위해 입학 규모를 축소('17년 450명 → '18년 300명)해 소수 정예화로 육성한다.

- 이론교육시,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전문기술까지 다양한 창업교육과 더불어, 온라인 교육과정을 도입해 교육생들의 자기 주도형 학습 편의도 제공하고,
- 체험교육에서는, 점포체험을 통해 점포운영을 체험하게 하거나,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점포구현이 어려운 경우 오피스형 사무실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체험을 지원하며,
- 전담멘토링의 경우, 일반경영/세무/회계/전문기술/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기존 1 대 1 방식 외에도 1 대 多, 多 대 多 등 매칭방식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신청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로그인(회원가입) 후, 신청기간內(2.8~28)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역별 전용교육장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042-363-7841~2)로 문의할 수 있다.
- 아울러, 주요 개편사항과 사업안내 등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2.13일(화)부터 22일(목)까지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

사업명[모집기간]	지역	일시	장소(문의처)
소상공인사관학교 7기 교육생 모집 '18.2.8(목)~2.28(수)	서울	'18.2.22(목) 14시~16시	◆ 서울전용교육장(☎ 02-723-0173~4)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3층
	부산	(1차) '18.2.13(화) (2차) '18.2.21(수) 16시~18시	◆ 부산전용교육장(☎ 051-463-0212~3)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대구	'18.2.20(화) 14시~16시	◆ 대구전용교육장(☎ 053-353-7667~8)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광주	(1차) '18.2.13(화) (2차) '18.2.20(화) 14시~16시	◆ 광주전용교육장(☎ 062-367-0135~6) 서구 천변좌로 268, KDB 생명빌딩 24층
	대전	'18.2.21(수) 14시~16시	◆ 대전전용교육장(☎ 042-363-7494~5)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경기	'18.2.20(화) 14시~16시	◆ 경기인천지역본부(☎ 031-204-7019)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3층 중회의실

참고1

소상공인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장 운영현황

지역	점포명	점포경영 체험장소 (점포명)	면적	비고
서울	총무로점	종구 총무로2가 50-6	198	
	대학로점	종로구 혜화동 143-2	205	
	중랑점	중랑구 숙선옹주로 6-9 목동자이(아) 상가 111호~118호	824	
	명동점	종구 회현동 3가 11-3 1층	231	
	강남점	강남구 언주로 508 상록회관 B1층	1,070	
부산	센텀시티점	해운대구 우동 1484 한화꿈에그린 A-103B2호	276	
	범일점	동구 범일동 830-9 천일빌딩 1, 2층	1,050	
대구	범어점	수성구 범어동 198-2 골드타워 1층 (범어점)	632	
	두류점	달서구 두류동 487-7 두류동빌딩 (두류점)	403	
	삼덕점	중구 삼덕동2가 270-1 소석빌딩 1층 (삼덕점)	555	
광주	상무1호점	서구 치평동 1216-3 쌍둥이빌딩 1층	849	
	상무2호점	서구 치평동 1254-1 엠씨타워 1층	668	
경기	수원판타지움점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66	1,056	
대전	둔산1호점	서구 둔산동 1275 아이빌딩 1층	363	
	은행동점	중구 은행동 55-5 사카스포츠 1층	216	
	중앙로점	중구 은행동 140-2 한국투자증권빌딩 1층	629	
	둔산2호점	서구 둔산동 1043 현대빌딩 1층	409	

□ 체험점포(꿈이룸)

-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점포 공간 구축(브랜드명 : 「꿈이 커지는 곳」, 꿈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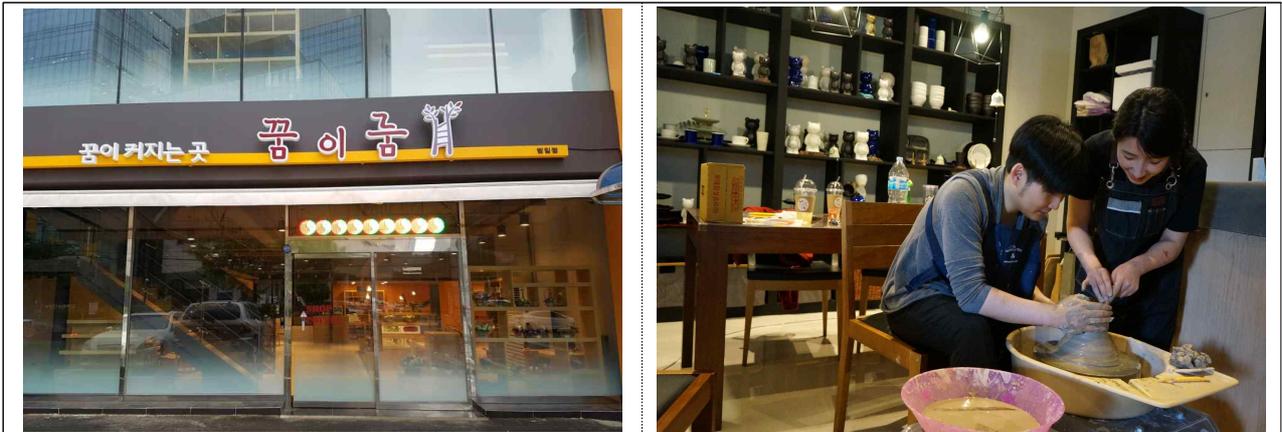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대전 등 전국 6개 주요 도시에 총 17개 체험점포 운영

< 체험점포 BI >

	<p>스스로 자라나는 사다리 - 꿈이 커지는 곳, 꿈이룸</p>
	<p>스스로 자라나는 사다리를 표현한 심벌과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룸)을 의미하는 pen drawing 워드마크의 조합으로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워내는 꿈아루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p>
	<p>Red는 소상공인의 뜨거운 열정을, Sarp Gray는 꿈이 펼쳐지는 소상공인사관학교의 신뢰성을 상징합니다.</p>

- 다양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교육생들이 서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9~10명의 교육생이 매장 공유 형태로 창업을 체험

< 소상공인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현장 >



□ 체험점포 현황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대전	계
점포수	5	2	3	2	1	4	17
평균면적	506(153평)	663(201평)	530(160평)	759(230평)	1,056(320평)	490(148평)	566(171평)

장애학생 차별금지,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등 배치 -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차별 금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등 의무 배치 등 2개 법안이 1월 30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차별 금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 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1】**

[학교도서관진흥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 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참고2】**

【참고】 법안별 세부내용 1부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차별 금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학생의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제출 요구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 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차별의 금지) ① (생 략)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 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 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 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 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생 략) 2. <u>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u> 3.·4. (생 략) <u><신 설></u></p> <p><u><신 설></u></p> <p>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생 략)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p>	<p>제4조(차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p> <p>1. (현행과 같음) 2. <u>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u> 3.·4. (현행과 같음) 5. <u>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 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제출을 요구</u> 6. <u>학생 생활지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u></p> <p>제38조의2(벌칙) ----- ----- -----.</p> <p>1.(현행과 같음) 2. -----</p>

현행	개정안
<p>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p> <p>3.(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 -----,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 -----</p> <p>3.(현행과 같음)</p> <p>4. <u>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u></p> <p>5. <u>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u></p>

2 학교도서관진흥법(일부개정)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 배치를 의무화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학교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 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였고,
 -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 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사서교사 등이 확대 배치되어 학생과 교원에 대한 학습·교수활동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생략)</p> <p>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u>둘 수 있다.</u></p> <p>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u>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u> <u>등에 필요한 사항은</u>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p>	<p>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둔다.</u></p> <p>③ ----- ----- --- <u>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u> <u>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u> <u>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u> <u>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u> <u>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u> <u>정한다.</u></p>

글로벌 수출을 위한 민관 공동 강릉 ICT홍보관 개관

- 인천공항 ICT라운지, 평창 ICT체험관, 강릉 IoT Street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2일 오후 2시 반, 강릉KTX역사부근에 위치한 **강릉 ICT홍보관**(이하 ‘홍보관’, 영문 ICT SQUARE)을 과기정통부 김용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했다.
-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평창 ICT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공항 ICT라운지 개소(’17. 11. 1.), 평창 ICT체험관 개관(’17. 11. 29.), 강릉 IoT Street 조성(’17. 12. 14.)을 해왔다.
- 이번 홍보관은 공모를 통해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21개사와 정부 연구개발(R&D) 결과물을 함께 전시하는 **민관공동홍보공간**으로 조성되었다.
- 기업관에는 피부 측정·분석·추천이 가능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융복합 디바이스, 스포츠 영상을 제공하는 증강현실(AR) 글래스,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K-POP 공연 기술, 스마트폰 앱으로 무선 조정이 가능한 장애인 휠체어 등 21개 중소기업의 수출유망제품이 전시된다.
 - 해당 기업들은 홍보관에 방문하는 해외 ICT 의사결정자 초청 행사와 연계하고 별도로 제작되는 기업 안내서를 배포하여 온·오프라인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홍보관 중앙에 배치된 여러 정부 R&D 결과물을 통해 5대 첨단 ICT 서비스(5G, IoT, UHD, AI, VR)를 체험할 수 있다.
 - 5G를 기반으로 생동감 있는 경기 관람 방법을 보여주는 5G 실감 서비스,

현재지상파방송보다4배이상선명한초고화질UHD 방송, 4인경쟁식으로운영하는가상현실(VR) 슈팅게임 및스키점프VR 시뮬레이션 등을통해방문객에게첨단기술의이해와즐거움을제공할예정이다.

- 홍보관은2월5일부터3월18일까지매일오전10시~22시운영되며, 입장료는무료이고, 예약을받지않으며, 홍보관을방문하는분은순차적으로관람할수있다
- 개관식에서과기정통부김용수차관은 “고품질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지만, 제한된여건으로인해해외진출이어려운강소기업의 홍보를지원하기위해ICT 홍보관을개관했다” 면서
 -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향후글로벌경쟁력이있는국내중소·중견기업이ICT 산업의성장주체가되어도약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할방법을모색할것” 이라고말했다.

□이어서김용수차관은강릉지역에서ICT올림픽의성공적개최를위해준비중인 ▲지상파UHD기반이동형 HD 방송차량, ▲조직위올림픽 정보통신운영센터및사이버침해대응센터, ▲IoT 스트리트서비스, ▲올림픽기간중우편물안전검색등현장도방문하여준비상황을점검하고,

- 평창올림픽의성공은사이버테러방지, 폭탄테러에대한우편물안전등이선결요건이므로철저한대비와국민이첨단ICT서비스를 마음껏누릴수있도록시스템의 완벽한 준비를당부하였다.

붙임 1 강릉 ICT 홍보관 개관식 계획

□ 추진목적

- 5대 분야(5G, IoT, UHD, AI, VR) ICT 기술 체험 및 유망 ICT 중소기업(21개社) 제품 전시를 통한 붐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 행사개요

- 일시, 장소 : 14:30~14:55, 강릉 ICT 홍보관(KTX강릉역 맞은편)
- 주최, 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 참석 대상 : 2차관, 강릉시장, 강릉시 의회 의장, 조직위 사무총장, 방송사 임원(KBS, MBC, SBS), ETRI원장, NIA부원장, 강원도 정보통신국장, 참여 중소기업 대표 등

□ 서비스 구성내역



□ 「UHD 모바일 체험버스」 개요

- (목적) 해외 방송국·전문가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UHD 모바일” 시연, 국내 기업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 카이미디어(모바일 방송 인코더), 로와시스(이동방송 수신기) 등 국책 연구 과제로 기술을 개발한 국내 중소기업이 방송 시스템에 실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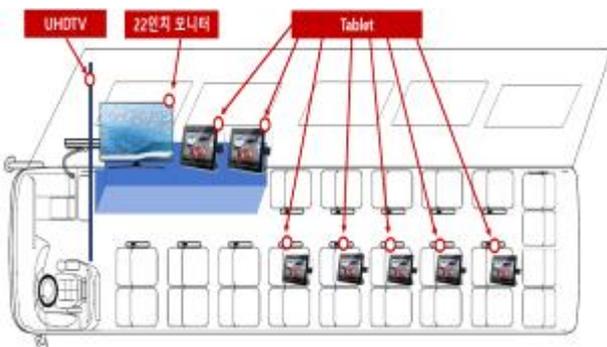
< 「모바일 UHD」 개요 >

- (기술) 지상파 UHD는 높은 전송효율로 허가된 1개 채널(6Mhz) 내에서 추가 설비 없이 고정형 UHD와 이동형 HD 방송 동시 제공 가능
- (장점) 지상파 UHD 기반 이동형 HD는 해상도, 확장성 면에서 DMB보다 우월

구분	UHD 모바일	지상파 DMB
해상도	1920×1080 (Full HD)	1280×720 (HD)
확장성	IP 방식으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서비스 가능	일반적 방송(TS)으로 양방향 서비스 어려움

- (체험버스) 이동방송 수신기를 탑재한 「UHD모바일 체험버스」를 외신기자·엔지니어 숙소를 중심으로 순회(외신서틀) 예정
- 전면(43인치 TV), 측면(22인치 모니터, 태블릿 2대), 좌석(태블릿 5대) 설치
- 올림픽 경기기간 ('18.2.9(금)~'18.2.25(목), 17일간), 매일 8시간 운영

□ (개시행사) D-7인 2월2일(금), '강릉지역 ICT 올림픽 준비현황 점검 행사'에서 차관, 장비제조사, 방송사 등 탑승 예정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한국전통문화센터’ 신규 개관

- 전통문화 융합 체험·전시와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홍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내에 한국전통문화센터를 새로 개관했다. 한국전통문화센터에서는 전통문화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과 문화올림픽을 홍보한다.

한국전통문화센터(이하 센터)는 2018년 1월 18일(목)에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출국장 3층 양쪽 편의공간(동관 253번 게이트, 서관 248번 게이트 인근)에 있다. 담백한 한옥 공간 디자인의 동관은 ‘배려와 소통의 문자, 한글’을, 서관은 ‘한국 장신공예(裝身工藝)의 멋과 향기’를 주제로 관광객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오롯이 체험하며 공감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 제2터미널 운영 항공사: 대한항공, 델타, 에어프랑스, 네덜란드 항공

센터의 동관에서는 이미 성공적인 기획전시로 평가받으며 일본, 미국에서도 전시회를 열었던 국립한글박물관의 ‘훈민정음과 한글디자인’의 콘텐츠를 재현했다. ▲ 미디어 예술 작품 ‘라이팅 토크-문(Lighting Talk-Moon, 이상진-서울대 미술관 소장)과 ▲ 한글과 색채를 활용한 입체 사진(렌티큘러) ‘색채어 시리즈(서현진)’, ▲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느낄 수 있는 입체적 구조의 ‘한글 목활자(민병걸)’, ▲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바탕으로 설계된 ‘한글블록(송봉규)’, ▲ 방향과 위치에 따라 기능이 다른 한글의 특징에 착안한 조명 ‘일점일획(맷음)’, ▲ 장식을 활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장석의자(하지훈)’ 등이 주요 작품으로 전시된다. 대청마루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소반 작품들이 전시돼 출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센터의 서관에서는 우리가 몸단장을 위해 쓰던 의복부터 각종 장신구류

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 공간은 크게 여성 수식(首飾, 비녀), 남성 수식, 혼례용 장식으로 구성되며 ▲ 전통 궁중 가례 행렬을 도자기 인형으로 표현한 '왕가의 산책(오주현)', ▲ 전통 누비옷의 진수를 보여주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기능보유자의 '누비저고리 및 치마(김해자)', ▲ 제89호 침선장 기능보유자의 '남자 돌쟁이 오방장 두루마기 및 사규삼, 술띠(구혜자)', ▲ 제22호 매듭장 기능보유자의 '은투호 삼작노리개(김혜순)', ▲ 경기무형문화재 제18호 옥장 기능보유자의 '상투관(김영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한국인의 고유 의복인 한복과 이를 현대 생활에 맞게 개량한 작품, 몸치레에 필요한 장식품인 모자, 장신구, 주머니, 신발 등도 전시된다.

제2터미널 한국전통문화센터의 전시 콘텐츠를 기획한 하지훈 교수(계원 예술대, 문화예술감독)는 “대한민국을 찾은 많은 외국인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환영은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옥의 외관만을 카메라에 담고 떠나는 것이 아쉬워서 센터를 한옥의 실내 모습으로 꾸미고 전통한옥이 가진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느낌으로 표현했다.”라며 “센터를 처음 방문한 순간부터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는 기획전시, 전시 주제와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전시 작가와 전통문화상품 소개 등을 통해 한국문화의 정수를 짧지만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센터에서는 전통문화관광인 '전통연희 탈춤공연'(매일 2회, 서관 낮 12시, 동관 오후 2시)을 펼치고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마스코트(이하 마스코트)들이 관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평창 동계올림픽(2. 9.~25.)과 동계 패럴림픽(3. 9.~18.), 문화올림픽을 알린다. 젊은 국악인과 연희단체로 구성된 '전통연희 탈춤공연'은 2017년 11월과 12월에도 열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고, 내·외국인 5,632명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는 동시에 평창 문화올림픽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기간 동안에는 체험객 사진 행사가 열려 총 150명에게 소정의 상품(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마스코트와 함께 전통공연을 즐기는 관람객(본인)의 모습을 누리소통망

(SNS)에 올린 뒤 화면을 캡처해 전자우편(chfairport@chf.or.kr)으로 발송하면 된다. 접수 시간, 접수 방법, 당첨자(중복자 제외) 등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단 누리집(www.ch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 내 제1터미널에도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시설 5개소가 있다. 연간 내·외국인 약 90만 명이 이곳에서 우리 겨레의 예지가 깃든 전통문화 전시를 관람하고,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센터를 통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제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문화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라며 “제2터미널 센터가 융합 체험·전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3~4개월마다 주제를 달리해 한국 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인천공항 제2터미널 한국전통문화센터 전시작품 현황
2. 인천공항 내 한국전통문화시설 운영 현황
3. 전통연희공연 ‘탈춤’ 프로그램 개요 및 구성(안)
- 별첨 제2터미널 내 전통문화 체험 및 마스코트 참여 사진

□ 한국전통문화센터 동관(253번 게이트 인근)

- 기획: 한글 원형을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한글 관련 작품 전시, 한글 의미 재해석
- 전시주제: 배려와 소통의 문자, '한글'

전시작품	작가명	내용	사진
Lighting Talk - Moon	이상진	LED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입체작품으로 빛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과 사물(한글 원형) 탐구	
색채어시리즈	서현진	한글과 색채를 통해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인 다양한 색채어 표현	
목활자 3*3	민병걸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느낄 수 있는 입체적구조의 한글 활자	
한글+색퍼즐	민병걸	자음과 모음의 쌍을 바꿔 가며 우리말의 다양한 소리를 담음	
한글블록	송봉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바탕으로 설계된 블록	
일점일획	맷음	방향과 위치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른 것에 착안하여 디자인한 한글조명	
장석의자	하지훈	의자에 한글 장식을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 한국전통문화센터 서관(248번 게이트 인근)

- 기획: 한국 장신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 구성
- 전시주제 : 한국 장신공예(裝身工藝)의 멋과 향기

전시작품	작가명	사진
왕가의 산책	오주현	
누비 액주름포 및 누비 저고리, 치마	김해자 (누비장)	
남자 돌쟁이_오방장 두루마기 및 사규삼, 슬띠	구혜자 (침선장)	
세조대 및 은투호삼작노리개	김혜순 (매듭장)	
백옥원형떨잠 및 뒤꽂이	김영희 (옥장)	
상투관		

붙임 2

인천공항내 한국전통문화시설 운영 현황

□ 제2터미널*내 운영 현황(2018년 개관)

* 제2터미널 운영 항공사 : 대한항공, 델타, 에어프랑스, 네덜란드 항공

○ 한국전통문화센터 2곳(한국문화재단에서 연중무휴 운영)

운영 시설	운영 현황	비고
한국전통문화센터(2개소) • 위치 : 3층 동편, 서편 • 규모 : 각 183㎡(55평)	• 운영 : 연중무휴(07:00~22:00) • 내용 : 한국문화체험, 전통연희공연(1일 2회), 문화상품 판매 등	
※ 한국전통문화센터 내 문화전시(동편 : 한글전 / 서편 : 한국의 장신전)		



전통연희공연(1일 2회)



한국문화전시(연중/동관)



한국문화전시(연중/서관)



한국문화체험(연중)

시설명칭	개관일	시설규모	비고
한국전통문화센터(동.서관 2개소)	2018.01.18.	각 183㎡(55평)	

□ 제1터미널내 운영 현황

○ 한국전통문화센터 3곳, 한국문화전시관 2곳 (한국문화재단에서 연중무휴 운영)

운영 시설	운영 현황	비고
한국전통문화센터(3개소) • 위치 : 3층 동편, 서편, 탑승동 • 규모 : 각 48.5평(탑승동 31평)	• 운영 : 연중무휴(06:30~22:00) • 내용 : 한국문화체험, 국악공연(1일 6회), 문화상품 판매 등	'17년 89만명 체험
한국문화전시관(2개소) • 위치 : 4층 동편, 서편 • 규모 : 각 60평	• 운영 : 연중무휴 전시(24시간) • 내용 : (동편) 캐릭터와 함께하는 궁궐여행 (서편) 한국의 쉽과 멋	



국악상설공연(1일 6회)



탑승동 복식체험(연중)



한국문화체험(연중)



왕가의 산책(1일 3회)

시설명칭	개관일	시설규모	비고
한국문화전시관 (동.서관 2개소)	2008.06.20.	각 198㎡(60평)	'17. 1월 재개관
한국전통문화센터(동.서관 2개소)	2009.03.17.	각 160㎡(49평)	'16. 2월 재개관
한국전통문화센터(탑승동관 1개소)	2012.04.25.	102㎡(31평)	'17. 3월 재개관

붙임 3

전통연희공연 ‘탈춤’ 프로그램 개요 및 구성(안)

□ 프로그램 개요

- 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출국장 한국전통문화센터 동서편 인근
- 시간 : 연중상설 일 2회(30분 간 공연)
 - 1차(서편) : 12:00 ~ 12:30, 2차(동편) : 14:00 ~ 14:30

□ 프로그램 구성(안)

구분	내 용		비고
1	길놀이	마부-사자-목중-취발이-사물놀이 출연자 일렬로 이동	올림픽 마스코트 참여
2	개인 및 합동춤	장단에 맞춰 봉산탈춤 목중춤 실시	
3	사자춤	사자탈춤	
4	사물놀이	버나놀이, 열두발놀이	
5	포토타임	관람객 참여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행사동선 및 장소

- 행사동선(※ 여객 주요 이동동선에 따라 구성)
 - 1차 : 한국전통문화센터 서편 노드정원 → 면세점 랜드마크 및 안내데스크 앞
→ 한국전통문화센터 서편 앞(248번 게이트 인근)
 - 2차 : 한국전통문화센터 동편 노드정원 → 면세점 랜드마크 및 안내데스크 앞
→ 한국전통문화센터 동편 앞(253번 게이트 인근)
- 행사장소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2터미널) 3층(양쪽 약 500미터 거리)



붙임 4

제2터미널 내 전통체험 및 마스코트 참여사진



전통문화관광 공연 및 복식체험



인천국제공항 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중인 마스코트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내 한국전통문화센터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 농정의 이정표 제시

-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발표 -

《 주 요 내 용 》

- '18~'22 발전계획의 성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시·도', '시·군·구' 계획의 상위계획
- '18~'22 발전계획의 특징
 - 문재인 정부 농정의 이정표로서, 농정비전 실천 로드맵 구체화
 - 농정의 3대 축(농업·환경·먹거리)을 중심으로 5대 정책, 14개 중과제 및 40개 세부과제 선정
 - 농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생태·경관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증진에 초점
- 주요 정책과제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농업 재해지원 강화 및 경영비 절감 등으로 농업인이 걱정없이 농사짓는 여건 조성
 - 농업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친환경농업 확산, 축산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등으로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 농식품바우처 시범 운영 및 국가·지역 푸드플랜 수립 등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 구현, 사회적 농업을 중심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조성

1 '18~'22 발전계획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농정 비전과 방향을 담은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시·도 및 시·군·구 발전계획의 상위계획이다.
- 금번 발전계획은 지난 '13~'17년 주요 농정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농정 여건 분석을 토대로 농업인과 소비자·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새 정부의 농정 발전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 전문기관 연구용역,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및 전문가 심층토론을 거쳤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의결('18.1.11)을 통해 발전계획을 확정하였다.
- 농식품부는 발전계획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농정방향을 제시하고, 농정 비전(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실현을 위한 로드맵 구체화에 역점을 두었다.
 - 새 정부 농정의 3대 핵심 축(농업·환경·먹거리)을 토대로, 5대 정책과제, 14개 중과제 및 4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과 함께 대내외 농정 여건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발전계획을 수립한 점은 과거 발전계획과 차별된 점이다.
- 한편, 발전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예산(안) 편성 시 발전계획과 사업비 반영을 연계하고, 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며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문재인 정부 농정방향과 특징

- 초고령화와 도·농간의 소득·복지격차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경쟁력 중심의 농정으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 또한, 최근 계속되는 가축질병 등 농업·농촌 환경 부하 증가와 농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농업계 내외부의 인식도 반영하였다.
- 이에,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농정은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핵심을 두고 농정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 ① 문재인정부 농정은 농업 활동을 통한 '생산물'보다 '사람 중심의 농정' 구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농촌 생태·경관 보전 등 공익적 가치 창출자로서 농업인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 ② 농정대상은 '농업인·농촌주민' 외에도 '소비자 등 국민 전체'로 확대한다.
 - 안심 먹거리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농업·농촌의 사회·문화·환경적 가치 제공에도 노력한다.
 - ③ 기존 관행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농업 혁신역량을 높이고, 농업·환경·먹거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농정을 추구한다.
 - ④ 또한, 참여와 협력의 농정 거버넌스 구축으로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추진한다.

3 '18~'22 주요 농정과제

①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사람 중심 농정'의 첫 걸음은 농업인이 가격·소득·경영에 대한 걱정없이 농사짓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에 농정 우선순위를 두었다.

- 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5년 간 채소가격안정제 확대('17: 생산량의 8% → '22: 30),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16: 27.5% → '22: 40)을 제고하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도 추진한다.

□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주요 농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을 보완하고, 농업·농촌의 생태·경관보전 등 공공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 * 추진일정(안) ('18) 직불제 개편 로드맵 수립 → ('20~'21) 법령 개정 → ('22) 직불제 개편 시행
- 친환경농업 직불단가를 인상('18)하고, 농업·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 단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 ② 농업 재해지원을 강화*하고, 농지 등을 활용한 농가 경영정상화 지원과 수입보장보험 내실화로 농가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한다.

- * 재해보험 품목 확대('17: 53개 → '22: 67), 품질·병충해 피해도 보장범위에 추가 등
- 농기계 공동이용비율 확대('16: 22% → '22: 30),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강화('18)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로 경영비 절감을 지원한다.

- ③ 채소가격안정제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품목별전국판매연합단 육성을 통한 농산물 판로 지원으로 가격 불안을 최소화한다.

- 논 타작물 재배 지원('18~'19, 10만 ha), 논 활용 다각화로 쌀 수급 안정을 달성하고, 쌀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인다.

2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 농가인구 감소, 자본투자 확대의 어려움 등 농업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 한계에 대응하여 혁신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의 진입, 농업의 외연 확대 등 농업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 또한, 경제·사회·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생산시스템 확대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한다.
 - 향후 5년 간 스마트팜 확대('17: 시설 4,000ha, 축산 750호, → '22: 7,000, 5,750), '22년까지 청년 창업농 1만명 육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비율('17: 5.0% → '22: 8.0)을 높인다.
-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농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4차산업 혁명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2: 4개소)과 현장 중심 R&D 추진** 등 농식품산업 혁신역량을 높인다.
 - 영농형 태양광 사업모델 개발('18)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 다각화를 유도한다.
 - ② '22년까지 **청년 창업농 1만 명을 양성**하고, 농생명소재·농자재·반려동물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지원 확대로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을 집중 육성한다.
 - ③ 생산·유통·소비기반 확충과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사육밀도·시설·관리 등 **축산업 허가기준 강화**로 환경·질병·안전문제 저감한다.
 - 동물복지를 고려한 새로운 사육기준 마련으로 사육환경의 근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국민이 행복하고, 소비자가 농업·농촌·농업인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먹거리 농정 실현을 위한 **안심 먹거리정책**을 추진한다.

-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소비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지역 차원의 통합적 먹거리 정책추진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 발전계획을 통해 ‘22년까지 식량자급률(‘16: 50.9% → ‘22: 55.4)과 식생활만족도(‘15: 42.0% → ‘22: 50.0)를 높이고,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률(‘16: 0.41% → ‘22: 0.36)은 낮출 계획이다.

□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농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먹거리 이슈의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18)하고,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수: (‘17) 2개소 → (‘22) 100 → (‘25) 모든 지자체

- 수입비중이 큰 작물의 자급률 목표치는 높이되, 초과공급 상태인 쌀의 목표치는 현실화하여 전체 자급률 목표치를 조정하되,
- 우량농지보전으로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밭작물 생산 확대, 해외 곡물의 안정적 반입 및 수요 확대를 추진한다.

② **초등학교 과일간식 제공***과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 운영 및 학교 급식의 식재료 품질을 높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한다.

* (‘18) 돌봄교실 → (‘20) 초등학교 1~3학년 → (‘22)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

- 이력제·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로 농식품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③ **예방 중심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 책임방역 강화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한다.

- 또한, GAP·HACCP 확대, ‘19년 농산물 PLS 시행 대비 농약 판매 관리 강화를 통해 농식품 안전성을 높인다.

4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 국민 소득수준 향상, 환경·생태가치 선호 등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농촌 자원을 보전·활용하여 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을 조성한다.
 - 통합적 지역개발, 농촌 특화형 복지 확충 및 농촌다움 복원 등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할 계획이다.
 - 발전계획을 통해 현재 18.4%인 농촌 인구를 19%까지 끌어 올리고, 농촌 정주 만족도('16: 5.62 → '22: 6.50)도 지속 높여나갈 계획이다.
-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을 위한 주요 농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통합적 지역개발, 농촌 환경 정비 및 산림 투자 확대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구현한다.
 - 농촌 정주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일괄 지원하는 **신활력 플러스('18: 10개소)** 등 본격 추진한다.
 - * 중심지 100개소 조성, 기초생활거점 500개소, 창의마을 1,000개소 조성('18~'22)
 - ② 100원택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등 **농촌 특화형 복지를 확충**하고, 농지연금·농업인 안전보험 강화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 여성농업인의 농업 공동경영주 등록 확산, 농협 조합원·임원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농촌을 구현한다.
 - ③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창업·자금·판로 지원과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18: 9개소)**으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 * 사회적농업 실천 농장 육성: ('18) 9개소 → ('20) 30 → ('22) 70
 - 농촌융복합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으로 농외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도시농업, 도농교류 확대 등 도농상생 공감대를 확산한다.

5 참여와 협력의 농정 추진체계 구축

- 농정 변화를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마다 창의적 농정을 추진하도록 참여와 협력의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가)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등 농정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하면서,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환류 될 수 있도록 현장농정을 본격 추진한다.
- 참여와 협력 농정을 위한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18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립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목표로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② 지자체 발전계획 수립, 지역 차원의 농업계 대의기구 설립 지원 등으로 지방농정 역량을 강화하여 협치농정을 실현한다.
 - FAC, APTEER 등 국제농업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농식품의 외연을 넓히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단계별 남북 농업협력도 추진한다.
 - ③ 현장 건의가 농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혁신, 책임, 공감, 신뢰의 FIRST* 농정을 체계화한다.
 - * Field(현장), Innovation(혁신), Responsibility(책임), Sympathy(공감), Trust(신뢰)
 - 현장중심 농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만족도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시상 등으로 현장농정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한다.

4 향후 추진계획

-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투융자방향을 ‘생산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질적 투자’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쌀 중심 재정구조를 다변화하고, 품목별 가격지지 예산은 절감 하되, 절감된 예산이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 직불제 확대 등 농정구조 개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문재인정부 새 농정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은 ‘18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앞으로 ‘19년 예산안 편성과 ‘18~’22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발전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앞으로 농식품부의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자체가 ‘19~’23년 발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농정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농식품부 관련 핵심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분야 국가표준 발전 논의...2018년도 워크숍 개최

◇ 국립환경과학원, '2018년 환경표준심의회 워크숍' 개최

◇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경험 공유로 환경분야 국가표준 전문가 양성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6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분야 국가표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18년도 환경표준심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표준심의회는 '산업표준화법' 및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운영규정'에 따라 2016년 3월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조직이다.
- 일반 및 생활 등 2개의 환경기술심의회로 구성됐으며, 각 환경기술심의회 밑에는 대기환경, 대기배출원, 실내공기질 등 12개 전문위원회가 속해 있다.
- 민·관 전문가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595종의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의 세부적인 기술 검토 및 767종의 국제표준 기술 검토 등을 맡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표준이 국제표준(IS)에 채택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 이번 워크숍은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의 2017년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성과와 2018년 운영계획 발표로 시작한다.
- 지난해 대표적인 성과는 우리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여 수질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앞두고 있는 조류독소 분석법을 비롯해 대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2건 등이다.
- 조류독소 분석법은 2017년 2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신규작업안이 채택된 후 국제표준으로 2020년 2월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11월에 제출한 대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2건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신규작업안 채택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며, 2월 안에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12개 전문위원회 분야별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올해 환경분야 국가표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또한, 심진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제연구그룹장은 4차 산업에서 쓰이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분야 국가표준과의 연계성을 모색하기 위해 ‘4차 산업 혁명의 본질과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는 환경표준의 지속발전을 위해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내외 환경표준 관련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장”이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산학협력을 통한 소통강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등 민간 중심의 환경분야 국가표준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표준심의회 워크숍프로그램 소개.

붙임 1

환경표준심의회 프로그램 소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20	등 록		
10:20~10:30	인 사 말		정현미 부장 (국립환경과학원)
10:30~10:45	환경분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2017년 운영실적 및 2018년 추진계획		최종우 센터장 (국립환경과학원)
10:45~11:00	ISO/TC 190 총회 개최 결과보고		이군택 교수 (서울대학교)
11:00~12:00	ISO/TC 활동보고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특별강연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미래)		심진보 박사 (ETRI 기술경제연구그룹장)
14:00~16:00	전문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 대기배출원 실내공기질 물환경 방사능 미생물 토양 폐기물관리 생활소음 일반소음 교통환경 제품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대표전문위원 선출 - 2017년 전문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 2018년 KS 도래표준 및 ISO 국제표준 기술검토 계획 논의 - 표준화과제 추진현황 신규과제 발굴 	전문위원회 위원장 진행
16:00~16:10	휴 식		
16:10~17:20	2018년 환경표준심의회 총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서비스·단순노무 등도 연장수당 월 20만원 제외, 수혜자 확대 효과 -
- 30인 이상 경비·청소원도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

-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예시) 월수령액 200만원 = 정액급여 180만원 +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
→ 월보수 18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

-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파란글씨는 개정사항)

- **비과세대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
- **대상근로자:**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190만원 이하**
(직전연도 과세소득 2천5백만원 이하)
- **대상직종:** 생산직 → **일부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종사자까지 확대**
 - ① 공장 및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②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④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 이하)

□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첫째,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하였다.

* (기존)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지원종료

○ 둘째,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 조정(인센티브 강화)할 예정이다.

* 대행사업주 1건당 3,000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는 5천원)

→ **6,000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는 **1만원**)

* 2월까지 신청 대행 실적 **10명 미만**이라도 대행사업주 1건당 **1만원** 지급

○ 셋째,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하였다.

-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기존) 30인 미만의 사업장만 경감혜택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되며,

☞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나서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감 대상에 포함

-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경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달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경감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되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신청대행기관 지원금 인상으로 생업으로 바쁜 사업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료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 아울러,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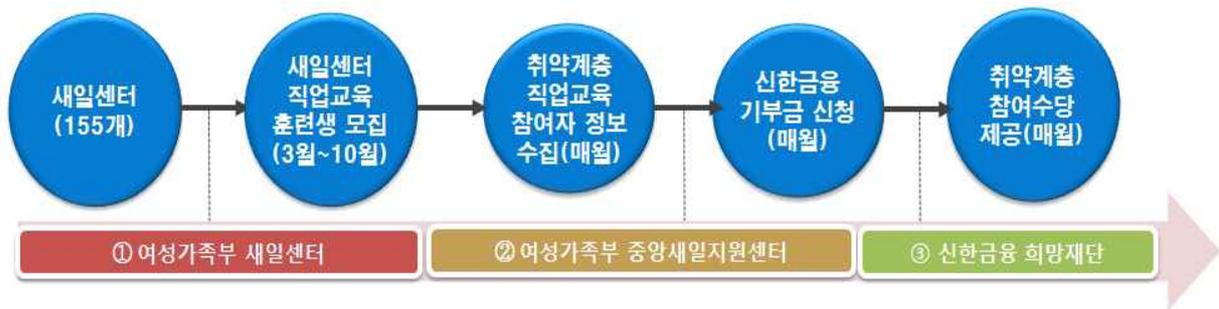
'여성일자리'와 '맞벌이가정 초등돌봄' 강화에 240억 원 규모 민관협력

-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90만 원 지급
- 맞벌이가정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150개소 설치 지원

-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 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1월 26일(금) 오전 11시 신한은행 본점(서울시 중구 소재)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및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240억 원을 지원하는 획기적 협력방안을 내놓는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저소득,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여성 대상으로 3년 간 총 15,000명에게 150억 원을 제공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 취약계층 여성*이 전국 15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최대 9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 저소득,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상 취약계층 범위 준용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재기지원사업 개요>



-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새일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이 별도로 채용되며,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취약계층 참여자 발굴 및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간 30억씩 3년 간 90억 원을 들여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도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웃 간 자녀를 함께 돌보고 육아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 ('10) 5개소 -> ('17) 160개소
 -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은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를 뒷받침하고 증가하는 맞벌이가정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3년 간 15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여가부 출범 이래 신한

금융그룹과 맺는 최초의 협약이자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민관협력이다. 이는 여성일자리의 중요성과 국가 돌봄책임성 강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의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 이어 “경력단절여성이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사업개요
 3.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재기지원 사업계획

□ 목 적

- 경력단절여성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한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여성에게 훈련수당 지급(※ 3년간 50억씩 취약계층 15,000명 지원 예정)
- 맞벌이가정 초등생 자녀의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3년간 30억씩 150개소 지원 예정)

□ 일 시 : '18. 1. 26.(금), 11:00~11:30(약 30분)

□ 장 소 : 신한은행 본점 16층 이사회회의실(서울시 중구)

□ 주요 참석자 : 약 15명 내외

- (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국장 등 8명
- (신한금융그룹) 회장, 부사장, 사회공헌부장 등 7명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장 소
11:00~11:10	10'	사전 환담(장관, 회장, 주요간부)	그룹회장실 (16층)
11:10~11:12	2'	회장실 → 이사회회의실 이동	신한은행본점 16층 (이사회 회의실)
11:12~11:14	2'	개회 및 내빈소개	
11:14~11:15	1'	사업소개(사회자)	
11:15~11:21	6'	· 인사말씀(I) : 장관 · 인사말씀(II) : 신한금융그룹회장	
11:21~11:25	4'	업무협약(MOU) 서명 및 기념촬영	
11:25		폐회	

□ 사업 개요

- (목적)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09년~)

상 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취업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술, 기업맞춤형, 취약계층과정 등 교육 · 새일역량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인·구직 매칭 · 인턴십 연계 · 동행면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 상담 및 멘토링 - 직장적응교육, 멘토링 등 ·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 성평등교육, 환경개선지원 등

- 새일센터 지정 현황 : 총 155개소 지정 운영

(’17.12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일반형센터	131	26	10	5	7	5	1	2	23	7	4	8	7	8	7	8	2	1
경력개발형센터	8	2	-	-	-	-	1	-	4	-	1	-	-	-	-	-	-	-
농어촌형센터	6	-	-	-	-	-	-	-	-	1	1	2	1	-	-	-	1	-
광역센터	10	-	1	-	1	-	1	-	2	-	1	-	1	1	1	1	-	-
총계	155	28	11	5	8	5	3	2	29	8	7	10	9	9	8	9	3	1

○ 사업 내용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 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인턴십)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기업 대상 1인 300만원(월60만원) 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구인·구직자의 취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 (경력단절 예방 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자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상담 프로그램,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등 시범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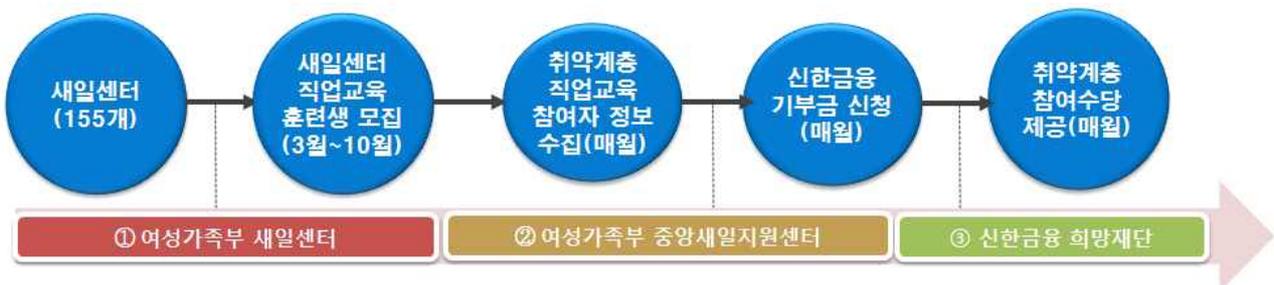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전국 155개소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 여성에게 훈련기간 동안 참여수당 지급(최대 90만원)
- (사업기간) 2018. 2. ~ 2020. 12.(3년)
- (사업예산) 신한금융그룹 사회공헌기금 총 150억원(※매년 50억원)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중 저소득,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에게 참여수당 지원
 - * 저소득,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상 취약계층 범위준용
- (지원 내용)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기간 동안 출석률 80% 이상인 취약계층여성에게 매월 교육 참여수당 지급(※연간 5000명)
 - * 예산규모 : 1인당 90만원 × 5,000명 (1일당 2만원, 월 최대 30만원, 3개월)
- (지원 방식)
 - 취약계층 참여자 정보수집 등을 위해 사업비(매년 5억원)*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발굴 및 자격요건 확인 등 전반적인 지원 업무 실시
 - * 사업비 : 전국 155개 새일센터별 취약계층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해 중앙 새일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추가채용(3명)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제공

□ **사업 추진방안**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 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한다

- 주거약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약칭 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 30.)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치

-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으로 장기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일정 비율(수도권 8%, 지방 5%)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함
-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으로
-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더 깐깐하게

-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대폭 개선.. 장거리 해상안전통신망 구축 -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상 200km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펠스(GEO-fence)*도 설치된다.

* 지오펠스(GEO-fence) : 해도상 특정수역에 가상울타리를 지정하여 이탈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여 어선을 관리하는 시스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5일(월)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 경위

- 391흥진호(38톤, 연승, 승선원 10명)가 ‘17.10.20(금) 10:19경 경북 울릉도 북동방 약 183마일 해상(동해중간수역)이라고 최종 위치보고 후 연락두절
- 포항어통→동해·포항해경에 “출어선 소재파악” 요청(10.21.22:31), 해양경찰청 사고접수 및 통신·항공·해상 수색 실시(10.22. 08:02~)

* 선주의 불법조업(월선 등)을 숨기기 위한 허위진술로 해상수색에 혼선 발생

- 북한조선중앙통신에서 나포된 391흥진호를 송환하겠다고 발표(10.27. 06:55경, 연합뉴스)후, 동일 18:38경 해경함정이 동해 NLL에서 흥진호 인수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1일 평균 1만 8천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며, 이 가운데 4천여 척의 어선이 근해해역으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동해 저도어장, 서해5도 어장 등 북한접경수역에서 매일 25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어, 이번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규정정비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 ▲월산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 등 4대 분야에 걸쳐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

기존에 사용하던 초단파대무선설비(VHF)로는 해상에서 보내오는 정보 중 위치정보와 같이 간단한 데이터만 수신 가능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위치발신정보를 보내 올 경우 수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 통신기지국을 증설하여 정밀한 조업어선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2019년까지 LTE-M 통신망 통신기지국(35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2020년까지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3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 중단파망 기지국은 속초, 강화도, 제주도에 설치예정이며, 전파(D-MF/HF) 특성상 3곳만 설치하여도 인근해 전해역 통신가능

정보통신기술(ICT)을 어선에 접목하여 장거리 데이터 통화, 기상정보 실시간 검색, 해상용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장착하고, 이를 통해 어선원 승선 자동인식·어선 자동입출항 신고·어선원 해상 추락 시 자동 SOS신고 등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 구축되는 통신환경에 발맞추어 V-PASS, VHF, SSB, GPS*와 같이 통신·안전·항행 기능을 통합한 장비를 개발하여 업계에 보급함

으로써 설치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 V-PASS(선박자동 입출항 단말기), VHF(초단파대 무선설비), SSB(중장거리 통신용 무선전화), GPS(위성항법시스템)

▲ 안전관리 규정정비

현재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리·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어선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 보다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여, 조업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 어선검사시 안전장비 봉인여부 확인 후 검사합격증 교부하고, 봉인 훼손시 불법어업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

▲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

불법조업 대응·나포 발생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선위치 보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원거리 조업어선에 승선 중인 선장 등 간부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간을 추가 편성*하여 홍진호 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높인다.

- * 월선관심수역 출어선은 특정해역(NLL과 인접하여 특별 관리되는 해역)에 준하여 연 2시간 특별교육 추가 이수 추진

▲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경, 해군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한·일 중간수역 내 북한 인접수역 등 월선관심수역*을 함께 관리하고, 어선안전조업시스템에 지오펜스(GEO-fence) 기능을 추가하여 어선 상황을 빈틈없이 확인한다.

* 북한인접수역인 조업자제해역과 인접한 일반해역(336, 337, 332, 333, 329 일부해구)으로 월선 우려 등이 있어 위치보고 등을 강화한 수역(참고 1 참조)

또한 「어선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특정해역 조업어선의 나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요령을 추가 기재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외에도, 통일부 주관으로 부처 간 협업과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동·서해 특정해역 출어선 현황 및 대화퇴어장 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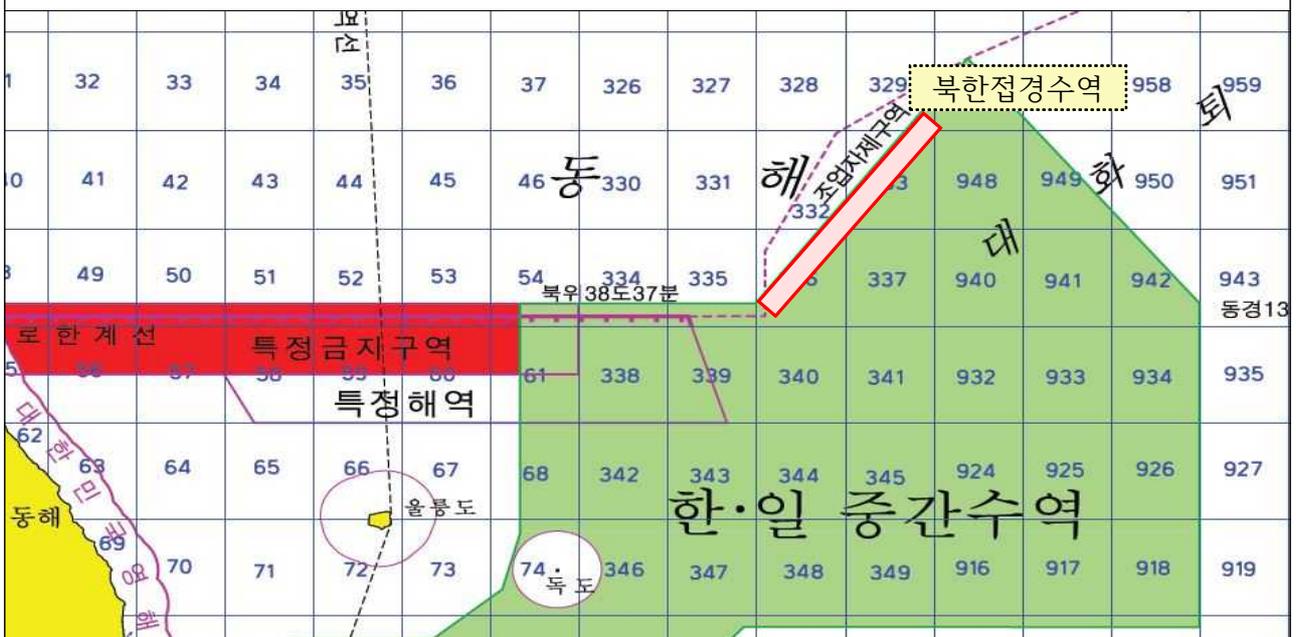
□ 동·서 특정해역 연도별 출어선 현황(2012~2016)

(단위 : 척)

어장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평균	일평균
계		82,625	99,809	106,551	79,925	101,527	94,085	256
저도어장		13,875	19,881	20,876	18,131	19,519	18,457	50
동해북방		2,534	2,801	3,103	1,074	1,384	2,179	6
동해특정		3,6358	43,114	45,380	24,827	42,720	38,479	105
동해조업자제		266	246	245	234	307	259	1
대화퇴		1,455	1,124	2,669	1,522	2,086	1,771	5
서해5도		9,250	11,124	13,328	14,723	12,983	12,281	33
서해특정		18,887	21,519	20,950	19,414	22,528	20,659	56

* 대화퇴어장은 한·일 중간수역 중 북위 38도 30분 이북 해역을 기준으로 조사

■ 위치보고 강화수역(대화퇴 분홍색 직사각형)



* 조업자제해역과 인접한 일반해역(336, 337, 332, 333, 329 일부해구)의 위치보고 강화(1일 1회 →2회)

참고 2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비 종류 등

□ 무선설비

종류	설치대상	세부설명
VHF-DSC	2톤이상 어선	초단파대 주파수(30MHz~300MHz), 단거리 통신용 무선전화, 청취의무 채널 Ch.16(조난신호)
MF/HF 무선설비	5톤이상 어선	중단파대 주파수(300kHz~3MHz), 중장거리 통신용 무선전화(SSB)
EPIRB	24m 이상 어선	비상위치지시용 무선설비(조난신호 송신)

□ 어선위치발신장비

- 설치목적 : 해양사고시 신속한 어선의 위치확인 및 안전운항 확보
 - *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MF/HF-DSC), 위성통신장치, V-PASS 등 8종
- 설치대상 비교 등

종 류	VHF-DSC (초단파대무선설비)	AIS (선박자동식별장치)	V-PASS (해양경비안전망)
관리 기관	해양수산부 (어업정보통신국)	해양수산부 (해사국)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본부)
장비류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데이터 통신용
목 적	위치보고(음성), 조난통신	충돌사고 예방용	출입항 신고자동화
설치대상	2톤 이상 의무	10톤 이상 의무	모든 선박
설치시기	‘17.1.1일부터 (차기 검사일 도래 설치, ~ ‘20.6.30 기한)		‘11년부터

통달거리



참고 3

LTE 해상통신망 확대구축(안) 도면 (●연근해해상안전통신망)

